

## [단독] 논도 되고 밭도 되는 하이브리드 농지 만든다...농어촌 공사, SOC 연구 착수

[최상현]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논 밭 구분 없이 경작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농지'를 만들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최근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밀·콩·옥수수 등 타 작물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농어촌공사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전략작물 등 타작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번 정부 시책에 맞춰, 논 중심의 생산 기반 체계를 다양한 작물로 확장하는 농업 SOC 체계를 개편방안 연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쌀 중심의 농업 생산 체계에서 탈피해 전반적인 식량자급률을 2021년 44.4%에서 2027년 55.5%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벼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추세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전년(72만7000헥타르(ha))대비 3만7000ha 줄인 69만ha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변수다. 벼 재배 농민들이 기존에 용·배수로 정비, 평탄작업, 농기계 구입 등에 이미 투입한 매몰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정부 수매 체계가 있는 벼와 달리, 밭 작물은 시장 경쟁에 직접 나서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공급 체계나 공부상 지목(전·답), 농촌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농업 SOC를 손질해 기존 논 농지를 필요에 따라 밭으로 경작할 수 있는 범용 농지로 바꾸겠다는 해법을 내놴다. 이를 통해 쌀 공급이 과잉될 시 밀이나 콩, 옥수수 등 다양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고부가가치의 전략 작물을 통해 농민이 수익을 얻

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쌀 과잉 공급 문제를 겪어왔고, 정책적으로 범용 농지 확대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8년 기준 전체 논 농지 241만ha의 45.6%에 해당하는 110만ha가 범용 논으로 변모했다. 범용 논에서는 논에 물을 가둬두는 배수 밸브를 필요에 따라 잠그거나 푸는 방식으로 농지 환경을 재배 작물에 맞추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2020~2021년 농지 범용화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관련 연구나 논의가 주춤한 상황이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다"면서 "중앙부처의 종합 정책 발표에 맞춰 선행적으로 솔루션 개발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식량 안보 제고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배수 시설 조절 등을 통해 논과 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한다면 다양한 식량 자급률이 고르게 올라갈 것"이라면서 "사료 곡물 대부분을 수입하는 실정이라 우리 축산물 가격도 국제 여건에 따라 등락이 심한데, 이런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hyun@dt.co.kr)